

‘식민지적 공공성’과 8·15 해방 공간*

원용진**

전통적으로 한국 언론사 논의는 언론을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특히 해방 전후 언론 연구에서 그런 경향은 더욱 짙다. 언론을 수동적으로 대한다 함은 언론을 수단 혹은 도구로 보는 태도를 말한다. 언론사 논의는 그 같은 경향 내에서 언론을 민족 해방, 민족국가수립에 기여했는지 혹은 아닌지로 분류하고 평가하려 했다. 민족언론, 친일언론 등과 같은 친근한 구분법은 그로부터 나왔다. 최근 들어 그 같은 경향을 벗어난 연구들이 등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같은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덕분에 언론의 독자적 문화, 민중들의 언론 습관, 일상 속의 언론 논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글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언론현상을 논의할 경우 해방당시를 섬세하게 설명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선 국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언론사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1945년 8월 15일이라는 해방 국면에서의 언론 상황을 점검하고, 그를 통해 새롭게 대안적으로 포착해야 할 언론 단면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 점검을 통해 해방 국면에서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언론이 해방의 의미를 나누었고, 민중들은 그 같은 의미를 언론을 통해 받아들이는 습관을 나름으로 형성한 식민지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공공성은 왜곡되고 식민지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시 민중들에게는 감정적 구조를 전달해주고 있었으며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 영역이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제에 의해 선사된 근대성의 공간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식민화된 공간만도 아닌 그 둘이 혼효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이후 한국 언론 문화, 관습, 언론을 받아들이는 습관 등 언론규율로 연장되었을 것이다.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서구적 근대성과 조우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해갈 수도 있다. 지금의 언론 문화를 정리해내는 데 있어 식민지적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주제어: 식민지적 공공성, 8·15 해방 공간, 민족주의 언론사 연구, 식민지 근대화론, JODK, 『매일신보』

1. 서론

1940년 한글 민간지가 폐간된 이후 시기를 언론사 연구자들은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차배근은 민족지 소멸기라 불렀고(1976), 송건호는 친일어용지 시대라 칭했다(1976). 여러 주장을 정리해 김민환은 민족지의 소멸시대라 정리했다(1993). 이들의 시기 구분, 명칭 부여에서는 민족지 유무 혹은 친일 어용지(혹은 기관지)의 활약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실 이 당시 존재하던 민간신문의 성격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신문을 두고 민족지라고 부르지는 쪽, 전혀 그렇지 않으므로 친일지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 그 양 면을 오가는 성격을 지녔음을 인정하지는 쪽으로 나뉘어 있다(김민환 외, 2008).¹⁾ 이처럼 민간신문을 서로 다르게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013-B 00153).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ilovesogang@gmail.com)

1) 일제 강점기 언론을 연구한 글을 모은 이 책은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장을 여러 번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보는 관점이 존재하긴 했다. 하지만 서로 달라 보이는 세 논의 모두 민족주의 인식론이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와 얼마만큼 거리를 두었는가 이념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언론사 연구에서 다루는 해방 전 일제 강점기는 민족주의적 경향의 인식자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언론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에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방 전후 언론인들에 대한 평가, 논의에서도 그런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매체 분석에 비해 양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언론인 분석에서도 민족주의적 업적은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언론인은 항일인사, 민족주의 언론지사, 아니면 친일분자라는 범주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해방 이후의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 연구실천들이 많았다. 언론, 언론인이 얼마만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는가로 평가하기도 했다.²⁾ 남북한을 통털은 국가수립을 꾀했는가 아니면 어느 한 쪽만의 임시적 국가 수립을 수공했는가 등으로 언론을 평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언론사 연구들을 그 유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민족, 항일, 친일 등을 기준으로 언론, 언론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민족주의가 한국 언론사 연구에서 해방 전후 한국 언론을 걸러내는 담론의 체(filter) 역할을 해온 셈이다. ‘민족지의 항일, 친일지의 친일 간 경쟁, 그리고 해방 후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전통적인 언론사 연구의 서사구조로 자리 잡아왔다.³⁾

해방이 되었지만 완전한 형태가 아닌 민족국가를 남한과 북한 각각이 수립했다. 애초 잠정적인 수립 국가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보고 있지만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 언론사 연구는 민족국가 수립을 정점으로 해 해방 전후 언론과 언론인을 다루었다. 민족국가의 수립을 잠정적 완결로 파악하고 회고록적인 언론사 기술을 펴왔다. 한 개체가 태어나 성장하고 숨을 거둘 때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는 회고록적 작업은 그 개체 즉 민족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가 현재,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더 오래된 과거가 과거로 질주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맺는 과거 간 폐쇄적 게임을 작성해간다. 해방 전후 한국 언론에 대한 연구들도 민족국가 수립을 이야기 정점으로 삼아 회고록적이고 자기 완결성을 드러내는 경향을 띠어 왔다.

물론 최근 일군의 연구에서는 그를 극복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단순히 항일과 친일의 단순한 대립구도를 넘어 저항과 협력의 복잡 과정을 파악하지는 주장도 있다(박용규, 2005). 민족주의적 인식론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음을 인식한 결과다. 언론인 연구에서도 사회주의 언론인 연구, 여성 언론인 연구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론의 수용에 관한

물론 이 저서의 저자들이 모두 어느 한 주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는 않다.

2) 언론이나 언론인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와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이에 수렴되었던 것 같다. 윤선희 (2006), 해방 전후사,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기억,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143~170쪽.
3) 김영희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4년 사이 한국 언론사를 연구한 박사학위논문 158편 중 50편이 일제시기와 해방 후 공간을 다루었다고 한다. 통사를 다루거나 시기와 무관한 논문 32편을 제외하면 이 시기 언론에 대한 관심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민족주의적 시점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평가는 많지 않다. 김영희도 그 같은 평가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문화, 일상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영희 (2005),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동향과 과제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94~125쪽.

연구들도 펼치고 있다. 문화사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언론에 접근하는 시도도 탈민족주의적 노력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유선영·박용규·이상길 외, 2007). 이들의 작업은 제도화된 기구, 장치 등에 대한 관심을 비 제도화된 일상, 수용 등으로 돌리게 한 바 있어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빈 구석을 메워주는 학문적 사건으로 읽히고 있다. 문화사 연구가 다루는 습속이나 일상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전통적 언론사 연구의 언론 제도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대체해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민중의 일상과 습속을 섭렵하는 일로 언론 제도를 규정하는 새로운 시도도 모색하고 있어 기대를 걸 만하다.

이 글은 해방 전후 언론현상에 대한 탐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는 이론적 목적을 지닌다. 새로운 연구들의 산발적 논의들을 다발로 묶으며 새롭게 언론사 연구를 제안하고자 하는 시도다. 하지만 이론을 열거하고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는 등 이론적 논의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이론을 논의하기 보다는 제안하는 목적을 갖는 탓에, 구체적 역사 공간을 택해 그것을 바라볼 새로운 인식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해 한국에서 벌어진 언론 현상,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할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 중심에 있던 언론인과 그들의 자세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를 정리하려 한다. 그 정리를 통해 식민시기 연구에서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식민지적 공공성’ 개념의 적용 가능성 점검을 시도할 것이다. 이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살피면서 한국 언론사 연구 특히 해방 공간 전후 언론에 대한 연구가 지녀왔던 민족주의 인식론을 비켜갈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사진 1> 서울역 앞에서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2. 민족주의로 읽는 해방 공간

한국의 역사 교과서, 역사서에서 해방 공간을 상징하는 자리를 놓고 두 장의 사진이 경합을 벌인 적이 있다(신주백, 2006, 64쪽). 이제 그 유효성을 잃은 것으로 짐작되는 한 장의 사진은 서울역 앞 군중을 담고 있다 <사진 1>. 군중들은 ‘해방’(鮮放)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⁴⁾ 북한의 해방 축하식 사진에도 같은 글씨체의 ‘해방’(解放) 플래카드가 등장했던 적은 있다. 해방 공간에서 ‘해방’(解放)은 특정 정파에 의해 사용된 표기법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 사진은 80년대 이전의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이들에게는 낯이 익다.

<사진 1>과 경합하는 또 한 장의 해방 공간 풍경을 담은 사진이 있다(<사진 2>).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 앞 만세 장면을 담고 있다. 수감 중이던 정치범 등이 풀려나 만세를 부르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 1>의 내용이 모호했던 데 비해 이 사진은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점차 역사 교과서들은 <사진 2>를 8월 15일 해방 공간을 드러내는 대표 사진으로 대접하고 있다. 특히 2001년에 시작된 제 7차 교과과정 개편으로 등장한 역사 검정 교과서들은 <사진 2>를 8월 15일의 상징으로 채택하고 있다(신주백, 64쪽). 갑자기 찾아온 해방이 아니라 광복, 해방 운동을 편 결과임을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역 앞을 서성대는 군중의 사진보다는 정치범의 만세를 담은 사진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 믿고 그를 대표 사진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점차 ‘해방’ 보다는 ‘광복’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다(신주백, 2006b).



<사진 2>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경합하고 있긴 하지만 두 사진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주목받은 시점이 다르고 그 지위도 달라져 하나는 교과서를 통해 살아있고, 다른 하나는 사라졌지만 몇 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통점을 가질 뿐 아니라 두 사진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한 계열이기도 하다. 두 사진이 담고 있는 시간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일이 아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16일이다. 역사책, 광복 사진첩 등 많은 자료들은 이 사진들에 8월 15일의 서울 풍경으로 오식하고 있다.⁵⁾ 그런 탓에 우리는 해방당일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기억하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진 1>은

4) 서지학자들에 따르면 해방의 ‘해’를 한자로 ‘解’로 적기도 했다고 한다.

5) 인터넷에서도 8·15 해방, 8·15 광복을 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두 사진뿐 아니라 여러 사진들이 8월 15일 당일 찍은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등장한다.

8월 16일 오후 1시 이후의 서울역 앞 풍경을 담고 있다. 8월 15일 오후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를 발족한 여운형은 8월 16일 해방과 건준 발족을 알리는 이벤트를 준비한다.⁶⁾ 8월 16일 정오 계동의 휘문학교 교정에서 해방 후 첫 대중집회를 가졌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군중 일부는 여운형의 연설 중 소련군이 입성한다며 서울역으로 향한다(이정식, 2006, 278쪽). ‘해방’(解放)이라고 적은 똑같은 모양의 플래카드가 휘문학교 교정, 그리고 서울역에서 연이어 등장한 것으로 미루어 8월 16일 1시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 1>은 북한의 해방 공간에서 나타난 플래카드와 표기방식을 나누고 있다는 점, 소련군을 맞는 장면임을 감안 특정 이념 성향을 드러내는 사진이라 할 수 있다.

<사진 2>는 8월 16일 오전 9시 경의 서대문 형무소 앞 풍경을 담고 있다. 전날 건준을 발족한 여운형은 정치범들의 석방 순간에 입회한다. 이어 그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이기형, 2005, 266쪽).⁷⁾ 경성보호관찰소장인 나가사키(長峯)는 여운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거나 혹은 동행한다. 그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여운형과 동행하는데 총독부가 여운형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를 대동한 여운형은 이 사진 장면 이후 11시께 있었던 경성의 마포형무소 석방에도 입회한다. 그런 다음 계동 휘문학교의 정오 대중 집회에 참가, 연설한다. 8월 16일까지 전국에서 석방된 사람은 만 여 명이 넘었다. 전국의 형무소, 구금소 등에서 석방된 정치범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지역 자치조직에 참가한다. 여운형이 청주의 사상범예방구금소에 동생 여운일(呂運一)을 대리인으로 보내 석방에 입회하게 한 것도 건준의 지역조직화 준비 뜻이다.

첫 번째 사진에 비해 두 번째 사진에서 이념성을 찾긴 어렵다. 첫 번째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그에 비해 두 번째 사진은 이야기 거리를 풍성하게 담고 있다. 항일과 민족 해방의 기쁨을 동시에 담고 있어 그날의 감격을 전하기엔 <사진 1>보다 훨씬 낫다. 정치범 석방 장면을 포착한 이 사진 다음 자리에 여운형의 휘문학교 대중집회 연설 장면을 놓고, 그런 다음 <사진 1>, 즉 서울역 앞 ‘해방’(解放) 사진을 위치시키면 그 일련의 연결이 바로 현재 수중에 남아있는 사진들로 꾸며볼 수 있는 8월 16일 하루의 경성 해방 풍경이다.

사진으로 요약해본 해방 풍경은 분주함과 조심스러움을 담고 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수군대는 민중들의 조바심을 읽을 수 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천황의 포즈담 수락

6) 8월 15일이 해방된 날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1949년 10월 1일 새롭게 탄생한 한국 정부가 국경일로 선포한 때부터다. 8월 15일은 일본 천황이 포즈담선언 수락을 방송한 날이긴 하지만 실제로 수락선언은 그 전날인 14일에 이뤄진다. 16일에 전쟁중지 명령을 내리고 9월 2일 미주리합에서 연합국과 항복조인식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9월 9일 일본군이 미군과 항복조인식을 가졌다.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했지만 이후 선전포고를 종료하거나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8월 15일이 갖는 의미는 일본 천황의 라디오 방송 외엔 없다 하겠다. 일본은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1963년 전국전몰자추도를 결정한 국가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9월 2일을 종전일 혹은 패전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국전몰자추도는 1982년 전몰자추도 및 평화기원일로 변경되고 이때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다.

7) 이기형은 여러 사료를 통해 8월 16일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출감 장면, 여운형의 연설 장면과 내용을 정확하게 회고하고 있었다.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날로 변해가는 정세 속에서 라디오를 끼고 그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을 조선 내 일본인을 상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71.8%의 라디오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천황의 목소리를 라디오를 통해 들었다. 전날부터 예고 방송이 나갔고, 신문을 통해서도 중대 방송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친 일본인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약 3.7%만 라디오를 들을 환경에 놓여 있었던 조선인의 경우 라디오를 통해 해방되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혹 천황의 옥음방송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금방 알아차린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1941년 현재 일본어로 ‘보통 회화 기능자’가 전체 조선인 인구의 8.73%였다고 한다(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41).⁸⁾ 한문투성이의 황실어를 금방 해독할 일본인조차 한정적이었을 정도나(고모리, 2003/2004) 라디오를 들었다 하더라도, 혹은 그것을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방의 의미를 확연하게 알아차린 한국인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소개한 두 사진에 담긴 8월 16일 그날까지도 ‘태극기의 물결’은 보이지 않는다.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마치 제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8월 15일 서울 거리에는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물결치듯 휘날렸다’고 떠벌이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날 서울 큰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라고 회고하는 사람들이 많다(문제안, 2005, 19쪽). 사태의 추이를 민중들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진 2> 속 만세 부르는 석방 인사를 구경하는 맨 앞 열의 사람들은 어쩌면 해방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거나, 다르게 받아들이고 전혀 다르게 그날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사진 3> ‘옥음방송을 듣는 경성의 일본인들’이라는 설명이 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1945년 8월 16일자에 실린 사진

교과서에서는 찾을 수는 없으나 사진화보나 개인의 자전적 출판, 현 신문지상 등에 종종 등장하는 8월 15일 사진이 하나 있다(<사진 3>). 이 사진에는 “무조건 항복한다는 일본 천황의

8)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41. 김영희 (2002), 일제시기 라디오의 출현과 청취자, 『한국언론학보』, 46호 2권, 150~183쪽에서 재인용.

육성방송을 듣고 침통해하는 서울의 일본인들”이라는 설명이 붙어다닌다. KBS 광복 60주년 특별 프로젝트팀이 편집한 『8·15의 기억』 19쪽, 『매일신보』 문화부장을 거쳤던 조용만의 『京城夜話』 284쪽, 서문당의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下』와 몇몇 신문 기사 등은 이 사진을 같은 설명을 달고 게재하고 있다. 8월 15일과 미군이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는 9월 9일 사이에 일본인이 보인 행동을 담은 공식 사진은 찾기 어렵다. 미군이 한국에 진주한 이후 일본인들을 찍은 사진은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두 날짜 사이 약 25일 동안 일본인들의 동향을 담은 사진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전쟁에서 승자만이 사진을 갖는다’는 말이(大島, 1975)⁹⁾ 실감난다. 패자인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찍지는 않았겠으나 한국인들이 찍어둔 일본인들의 사진은 존재함직 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승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 한국인들의 비애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해방 공간 일본인을 담은 이 사진은 귀중한 사진이다. 해방 공간에서 보였던 일본인들의 당혹스러움이나 침통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면 어떤 사진이든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은 뻔하다. <사진 3>은 누구라도 그 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픈 사진이 기도 하다. 그런데 원래 이 사진은 1945년 8월 16일자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도쿄 본사판 제2면에 실려 있었다(佐藤, 2005, 54쪽).¹⁰⁾ 사진 설명에는 “불탄 흔적이 있는 곳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요즈야 마을 사람들”이라고 붙어 있다. 언제부턴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알 길은 없지만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 한국에서 찍은 것으로 바뀌어 대중 서적에, 신문에 실리고 있었다. 8월 15일 정국을 묘사하는 데 적절성이 있었을 거라는 믿음, 욕망으로 이 사진은 여러 출판물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석 장의 사진은 그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그 지위만으로 8월 15일 해방 공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전해준다. 그들의 신세 풀이를 통해 해방 공간 서사를 시간, 공간에 따라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전혀 새로운 구성도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적절한 이야기가 된다면 사진 속 기표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도록 기의를 붙여버리기도 한다. 시간을 공간으로 옮겨놓는 사진의 속성을 이용해(주형일, 2003, 16쪽), 기억을 그 공간에 갖다 붙이게 만들고, 다시 시간을 불러일으켜 새롭게 기억을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낸 셈이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해방 공간이 수많은 놀라움, 수군댐, 전달, 소통, 황당함, 어리둥절 등이 한데 모자이크된 것임을 전해준다. 역사책들은 이 사진들을 한 치도 오차 없이 배치해 마치 손꼽아 기다리며 항일했던 결과로 해방이 온 것처럼 말하고 있는 듯하다. ‘민족은 기다리던 그날을 마침내 맞게 되었고,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식의 내러티브에 사진들을 활용해왔다.

9) 大島渚 (1975), 『體驗の戰後映像論』, 朝日選書, 그가 말하듯 미주리함에서의 항복 조인식 사진은 있지만 천황의 육음방송을 찍은 사진은 어디에도 없다.

10) 이는 교토대학의 사토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KBS 프로젝트 팀에서 발간한 책을 KBS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오류를 찾아내고 필자에게 지적해주었다. 이 사진은 사토 교수의 저서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佐藤卓己 (2005), 『八月十五日の神話』, ちくま新書, 54쪽.

3. 해방 공간에서의 식민지적 공공성

해방 순간이라고 밝힌 사진들에는 어김없이 건준과 여운형이 박혀 있다. 예로 들었던 두 사진 모두 그렇다. 여운형의 건준은 해방 공간에서 정치의 핵심 축이었다. 1944년에 결성된 ‘건국동맹’은 8월 15일 해방 당일 오후 건준으로 전환한다. 해방을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가장 체계적으로 받아들였던 건준은 아직 해방에 조바심을 내고, 당혹스러워 하는 민중을 위해 먼저 해방의 의미를 전달해야 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한 소식을 정리하고 그에 맞춰 여론을 주도하는 일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자신들과 민중 간 정보 차를 줄여가는 일이 중요했다. 8월 16일 휘문학교에서 열린 대중집회가 첫 번째 소통 이벤트였다. 그날 경성 시내 여러 곳에 해방과 집회를 알리는 전단을 뿌렸다. 물론 그 보다 더 큰 규모로 전국을 아우르는 ‘소통(疎通) 프로젝트’도 필요했고, 그에도 공을 들였다. 건준 설치 이후 여운형이 건준 내 ‘신문위원회’로 하여금 경성방송(JODK)¹¹⁾과 『매일신보』를 접수토록 한 것은 조직 보전과 확대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여운형을 권력 이양자로 선택한 일을 놓고는 주장이 엇갈린다. 여운형 이전에 송진우를 만났다는 송진우 우선 선택설이 있다. 포츠담 선언 수락이 결정될 것을 감지한 총독부는 조선 내 일본인의 안전 대책에 몰두한다.¹²⁾ 이미 8월 8일 오후 5시(일본시간 오후 11시) 선전포고를 한 소련의 한반도 진출을 막아내는 동시에 조선의 자치 권한을 특정 집단에 넘겨 안위를 약속받으려 했다. 그 일환으로 총독부는 송진우를 찾았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여운형을 찾았다는 설이 송진우 우선 선택설이다. 송진우 우선 선택설은 김준연, 설의식 등이 제기했다(김준연, 1945). 김준연은 8월 13일 경찰부장이 조선총독부의 권력 4분의 3을 줄 터이니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송진우가 거절했다고 기술하고 있다(김준연, 1946). 송진우는 일관되게 일제와의 협력을 거부하며 중경 임시정부가 권력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단파 라디오 방송 수신을 통해 전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송진우는 임시정부에 권한을 넘기는 수순 등 해방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송진우 우선 접촉설은 김규식의 측근이었던 송남헌과 정무총감 엔도(安藤)의 회고와 맞부딪힌다. 김규식의 측근인 송남헌은 총독부가 6월경에 송진우에게 <국민총력연맹>에 협조할 것을 부탁했는데 김준연이 그를 착각해 퍼뜨렸다고 주장한다(심지연, 2000).¹³⁾ 총독부는 당시 국내 조직기반을 갖고 있으며 대중의 신망을 받은 여운형을 택했다고 한다. 연락 받은 여운형 측에서 송진우와 대책을 수립하려 찾았으나 거절했다는 것이 송남헌의 증언이다. 정무총감이었던 엔도도 1957년 일본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송진우 우선 선택설을 일축했다. “... 한국에서는

11) 건준의 경성방송 접수 시도는 여러 방송원들이 증언하고 있다. 건준의 청년 단원들이 8월 16일 목총으로 무장하고 접수하려 했으나 방송원들이 거부했고, 이어 일본군 헌병들이 경성방송을 재 접수하였다고 증언한다. 건준은 『매일신보』를 접수해 『해방일보』를 발간하기로 계획했지만 일본 헌병과 『매일신보』 내부의 반발로 접수하는 데 실패한다.

12) 『매일신보』 8월 17일자에 의하면 조선에 있는 일본인은 약 백십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13) 우사연구회 엮음, 심지연 저 (2000), 『송남헌 회고록 김규식과 함께한 길』, 서울: 한울.

내가 처음 송진우 씨와 이 문제를 상의했으나 송 씨가 거부했기 때문에 여(운형) 씨를 선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듯하나 그것은 잘못이며 내가 송 씨 및 안재홍, 장덕수 씨를 만난 것은 종전 전 총력연맹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분들은 결연하게 거부해왔기 때문에 나도 이분들의 신념을 이해하고 두 번 다시 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종전 후 송 씨와 안 씨에 교섭한 일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¹⁴⁾

엇갈리는 두 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경합하는 진술은 해방 직전 정치계의 분주함을 전해준다. 총독부는 조선 내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했다. 그 첫 조치로 유력한 조선 정치인들을 찾았다. 경성 내 유력 정치인들은 일본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 송진우의 경우 설의식 등으로부터 많은 소식을 전해 듣는다. 설의식은 1944년부터 단파라디오를 수신했다. 그리고 친분이 있던 일본 기자(伊集院兼雄)로부터¹⁵⁾ 해방 하루 전날 새벽에 옥음방송에 대한 전말을 전해 들었을 정도로 여러 소식 채널을 지니고 있었다. 청취한 방송 내용, 소식을 송진우에게 일일이 전달하였다(설의식, 1947). 송진우는 이미 폐간되었지만 잔존해 있던 『동아일보』 지국망을 가동해 여러 첩보들을 접할 수도 있었다. 1940년 8월 10일 폐간 당시 전국의 『동아일보』 지국은 354개에 달했다. 여운형 또한 1944년부터 손웅(본명 손치웅)으로부터 단파방송의 내용을 종합한 내용을 전달받고 있었다(이만규, 1946). 손웅은 최근 몽양 기념 사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배운 광석 라디오 제작 기술을 활용해 라디오를 직접 만들어 수신했고 매주 청취내용을 요약해 여운형에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¹⁶⁾ 그 이전에도 여운형은 여러 경로(경성방송 등)를 통해 단파방송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1944년 8월에 결성된 건국동맹의 숫자가 같은 해 12월 전국적으로 10만 2~3천여 명에 이르렀다는 여운형의 발언을 감안하면¹⁷⁾ 당시의 주요 정치인들은 일본의 정치 일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경성 정치 지도자들의 정보 취득은 특별한 경우였다. 그들에 비하면 민중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량과 채널은 한정되어 있었다. 간혹 풍문으로 전해 듣기는 하지만 그를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총독부 관리 하에 있던 신문과 방송은 늘 일본 승전을 반복할 뿐이었다. 일반 민중들은 해방 준비는커녕 쉽게 해방이 다가오리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혹 일본의 패전과 관련된 소문이 들려오긴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당장 현실화되어 눈앞에서 벌어질 지는 예상치 못했다(변은진, 1999). 중대방송이 있다고 예고방송을 할 때조차도 대 소련 선전포고일거라는 짐작이 더 많았을 정도였다. 심지어 많은 조선 내 일본인들도 선전포고일거라고 알고 있었다 한다. 8월 15일 학도병으로 떠나는 친척 사진을 찍었다는 증언도 있었다(이경모, 1991).

1945년 8월 15일 정오 경성방송(JODK)을 통해 천황의 옥음방송이 전달되었다. 벽보, 뼈라, 구전(口傳)을 통해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졌다.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치밀한 준비도 없이 찾아온 해방이었다. 조선 내 일본인들은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혹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것인가 등등의 고민이 있었겠지만(오오카와, 2005,

14) 『國際 タイムス』[1957. 8. 16字(第84號)]

15) 『도쿄 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경성지국장을 역임했고, 해방 당시는 정무총감 엔도의 사설 비서로 있었다.

16) www.mongyang.org

17) 『자유신문』(1945. 12. 8).

57쪽) 막상 해방을 맞은 조선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함 속에 놓여 있었다. 적어도 매일같이 일제의 지배체제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민중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8·15를 평안북도 시골에서 맞은 이영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해방의 소식을 듣고도 어쩔 줄 모르고 엉겨주춤할 뿐이었다. 서슬이 시퍼런 일본의 통치가 그렇게 어느 날 12시를 기해 딱 부러지게 끝나고 … 그런 모든 억압이 싹 건어치워지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방이 실감되지 않았다”(이영희, 1988, 91쪽). 경성방송의 한 방송원은 8·15 당시 일본인을 쳐다보며 “대체 너희들은 무엇이냐 敵 怨讐? 그러나 우리 또한 勝者가 아니었다”고 회고하고 있었다(이덕근, 1979). 준비되지 않은 감격은 해방 전후에 등장한 여러 장면들에서 읽을 수 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1945년 8월 16일 모임까지도 태극기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다(<사진 1>, <사진 2>에서도 그런 정황을 엿볼 수 있다).

8월 16일부터 태극기가 몇몇 지역에서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 모양이 독특했다. 일장기를 변형해 그린 태극기였다. 이경모가 전남 곡성에서 찍은 태극기 사진은 대부분 그랬다. 태극기의 형상을 알지 못했던 탓에 다양각색의 태극기가 거리를 누볐다. 8월 17일이 되면 이미 소련군에 의해 해방이 된 북부 지역을 제외한 조선의 남부지역 모두는 해방의 감격에 휩쓸린다. 소식이 늦게 들어간 오지여까지도 장날 등을 통해 소식은 모두 전해졌다(정근식, 2006, 80쪽). 거리에 나선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했지만 만세라는 말 말고는 그 어떤 슬로건도 달지 못했다. 이구동성으로 부를 수 있는 해방가도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태극기만이 조선 대중에게 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다. 몇몇 일본인들은 회고록에서 조선인들이 8월 16일부터 「반딧불」(螢の光)이라는 노래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해방가를 불렀다고 전한다(森田, 1964, 84쪽).¹⁸⁾

치안유지 책임을 맡은 측과 민중들 간의 정보 격차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의 공간은 안정적 질서를 유지한다. 8월 16일부터 25일까지의 조선 내 사건발생 건수를 보면 주로 경찰서나 신사, 조선인 경찰이나 행정관리에 대한 폭행에 집중되고 있다(森田·長田, 1964, 13~14쪽). 재산에 대한 보복 폭력에서는 경찰관서와 신사, 봉안전에 대한 습격, 방화, 파괴가 주를 이루었다(최영호, 2008, 280쪽). 인명 살상 건을 보면 일본인에 대한 폭행은 살해 6명, 폭행 21명, 상해 8명에 이른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인은 25명에 달했다. 그에 비해 일본에 부역한 조선인에 대한 폭행은 살해 21명, 폭행 118명, 상해 67명에 이르렀다. 보복적 폭력은 식민통치기구와 ‘민족반역자’에 집중되고 있었던 셈이다. 일본인에 대한 폭행은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한정되었고, 조선인에 대한 폭행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었음은 일본인 관리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었다(森田·長田, 1964, 17쪽). 이 같은 사건의 빈도도 8월 20일을 전후해서 급격히 감소한다.¹⁹⁾

해방 공간 내에서 질서유지가 가능했던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추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일본군의 존재다. 총독부의 치안권 이양과 관계없이 조선 주둔 일본군은 치안유지를 위해 주요

18) 이후 1946년에 『解放歌』, 『獨立行進曲』이 만들어졌고, 1948년에 『光復節 노래』가 만들어진다.

19) 심지어 일본인들이 내놓은 패전 이후 대책에서는 조선인들과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짐치기도 했다고 한다.

관공서 경비에 나선다. 『경성일보』의 나카호(中保典作) 부사장은 일본군에 힘입어 사육을 지킬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경성방송의 일본 방송원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일본군의 경비 배치는 주요 관공서에 한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비의 적극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본의 재산으로 보호해야 할 곳은 어김없이 경비에 나섰기에 질서 유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신주백, 2006c, 69~95쪽). 총독부 건물의 일장기는 9월 9일에서야 미국의 성조기가 올려지면서 내려진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8월 15일 이후 일본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갖고 있지 못한 데서도 일본인들이 권력을 놓고 있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치안유지를 약속했던 건준 조직의 힘이 질서 유지를 가능하게 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8월 15일 오후 건국동맹에서 건준으로 간판을 바꾸어 단 후 각 지역에서 건준지부, 치안유지부, 인민위원회 등의 이름을 한 지역 조직들이 치안유지를 담당한다. 『매일신보』 8월 17일자에 실린 건준의 전단 사진을 보면 “조선동포여, 중대한 현 단계에 있어 절대적 지중과 안정을 요청한다. 우리들의 장래에 광명이 있으니 경거망동은 절대적 금물이다. 제위의 일어일동이 민족의 휴척에 지대한 영향 있는 것을 맹성하라. 절대적 지중으로 지도층의 포고에 따르기를 유의하라”고 적혀 있다. 초기 건준이 보인 치안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식량검사소에서 일을 하던 중 해방을 맞은 강창덕은 “건국동맹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나서서 군중동원을 하더라고요. 신문, 노트, 교과서 쪼가리 등 쓸 수 있는 종이란 종이에선 모두 붓으로 조선독립만세라고 써서 여기저기 붙이기 시작했어요”라고 증언하고 있다(강창덕, 2005, 182~183쪽). 건준에 대한 연구들도 지역 조직이 벌인 치안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안종철, 1990; 김동만, 1991; 허은, 1994; 김창진, 1987). 당시 19세였던 이경모가 8월 15일 광양에서 찍은 사진에는 건준 지역조직의 초기 형태인 시국수습군민회의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에는 당시 예비 검속에 걸려 광양 유치장 신세를 졌던 이은상(李殷相)을 중심으로 한 마을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²⁰⁾ 신주백에 따르면 총독부와 일본군의 구 세력, 그리고 건준으로 대표되는 신세력 어느 쪽도 완전히 다른 한쪽을 압도하지 못한 “이중권력” 상태가 해방 공간에서 연출되었다고 한다(신주백, 2006c). 이 둘의 조합이 질서 유지를 배가시키는 효과를 냈을 수도 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치안유지 수단은 제한적이긴 했으나 여전히 전파력을 가지고 있던 신문과 방송이다. 천황의 옥음 방송 이후 이에 대한 조선인 방송원인 민재원의 해설방송이 있었다. 그 후 다카하시(高橋) 경무국장의 ‘중전을 맞이하여’라는 담화방송이 행해졌다(시노하라, 1981; 쓰가와, 1999). 다카하시의 담화 내용은 조선어로 번역되어 방송되었다. 일본어로만 방송되던 제 1방송이 일본어와 조선어를 혼용해 방송하기 시작했다. 여운형이 건준의 발족을 알리고 나선 대중연설회가 있던 8월 16일, 건준의 부위원장인 안재홍은 오후 3시 15분부터 약 20분 동안 라디오 방송을 행한다. 그날 안재홍의 방송은 2회 더 행해졌다. 건준 결성을 알리고, 안전 확보와 조선, 일본 양 민족의 마찰 경계, 치안유지조직의 결성 그리고 여운형과 총독부 간에 있었던 약속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남아 있던 한글 신문이자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

20) 이경모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이 회의를 담은 사진이 8월 15일을 담은 유일한 사진일 가능성이 크다.

보』도 8월 15일부터 질서를 강조하는 기사들을 실는다. 17일에는 건준의 결성을 알리고, 여운형의 16일자 연설내용, 안재홍의 16일자 라디오방송 내용, 그리고 건준이 뿌린 전단을 지면에 실는다. 18일에는 여운형의 인터뷰와 건준의 지령을 박스기사로 실고 있다.

채만식은 그의 친일적 행위를 반성하는 자전적 단편 소설에서 “8·15의 그런 편안한 해방을 우리가 황재할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고 고백했다(채만식, 1948). 그리고 해방이 되면 “일본이 패전을 하는 그날 그 순간부터 치안과 질서가 무능한 것이 됨을 따라 칼 찬 순사와 기관총 가진 패잔 일병과 주먹심 있는 평민과 강도와 폭도질을 함부로 하고 일변 필연적인 사태로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대규모의 기근”이 올 것이라 예상했다고 한다. 그의 고백은 해방 후 3년이 지난 다음 이뤄진 것이다. 3년이 지난 해방의 기억을 명징한 기억으로 받아들이긴 힘들다. 자신이 일본 제국의 질서에 매료되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의 힘이 무너졌음에도 채만식이 우려했다던 혼동만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질서 유지에 어느 한 편이 두드러지게 기여했다기보다는 이 셋이 한데 조합을 이룬 결과였다.

8월 한 달 이내에 벌어진 건준 결성 그리고 이어진 각 지역의 건준지부, 인민위원회의 설립 등에서 일본 경찰이나 군과의 마찰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 둘의 조합은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다. 언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건준 지부 설립과 관련된 연구들이 채집한 증언은 각 지역 건준 설치를 둘러싸고 언론의 내용에 고무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최초의 모임이 언론인이었던 『매일신보』 지국장이었던 국기열의 집에서 열리는 등 언론인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언론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대구 지역에서도 서울로 사람을 보내 건준의 지침을 받거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중권력이라는 모호한 정치 공간 내에서도 사회적 소통이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정보 생산, 정보 추구, 정보 확산 행위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4. 식민지 언론인의 공공성 자의식

건준과 『매일신보』 그리고 경성방송의 조합이 해방 공간에서 이뤄지기는 했지만 어울리기 힘든 기구들 간의 조합임에는 틀림없다. 건준은 대체로 좌파 민족주의로 일컬어져 왔지만 때로는 좌익, 공산주의 조직으로 알려져 왔다. 송진우 등의 민족 지도자들이 건준을 거부한 것도 이념적 격차 탓이었다. 그런데 총독부 기관지로 알려진 『매일신보』, 총력전의 ‘니팔수’로 알려진 경성방송이 건준과 해방 공간에서 협조해서 치안유지 등의 효과를 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중 있게 다룬 건준 논의들에서도 조직의 소통 체계와 소통 방식은 다루지 않고 있다. 『매일신보』, 경성방송 간 조합 가능성은 아예 점치지 않았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대한 것들이 많다. 대중음악, 전통음악, 문학, 조선어 등과 관련한 연구들이 그것이다. 중일전쟁 이후, 해방 이전의 언론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정진석, 2005).

전통적으로 언론사 연구에서는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와 총독부 지원, 관리감독을 받았던 ‘JODK 경성방송’을 어떤 친일성향을 보였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두 기관이 펼친 내용은 일본이 식민경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사료로 활용될 정도였다. 최근 ‘식민지 근대성’ 연구들이 다른 측면을 조금씩 조명하기 시작하고는 있다. 탈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그들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친일과 저항으로 뚜렷하게 나눌 수 없는 현상들이 많기에 이분법적 기준이 아닌 방식으로 그들을 평가해보자는 입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저항과 협력이 동요하면서 양면적으로 이뤄지는 모습도 상정하지는 제안이다(윤해동, 2003, 34~35쪽).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 그것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학습하고 있는 형태에서 해방이라는 사건은 언론계 내부에 심한 동요를 가져왔을 것이다.

8월 16일에 건준에 선무 방송을 허용하고, 17일자 지면부터 『매일신보』가 건준의 치안유지 기사를 실은 것은 모두 총독부의 지시에 의한 것일까. 건준의 전국적 조직화와 방송, 신문의 조합은 분명 이질적 화학작용이긴 했지만 그것이 자아낸 효과는 매우 큰 것이었다. 하지만 경성방송, 『매일신보』 해방 공간에서의 언론활동은 해방 이전의 친일성 혹은 기관성 평가에 묻혀 구체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다. 2007년 2월 16일 한반도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방송공사(KBS)는 ‘한국방송 80년 특별제작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대대적 홍보를 나섰었다. 홍보는 곧 논란을 맞게 된다. 일제 때 설립된 경성방송을 과연 한국 방송 역사로 볼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란이었다(방학진, 2007).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쪽은 친일문제를 다루는 민족문제연구소였다. 그런 탓에 ‘한국방송 80주년’은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아직 민족언론과 친일언론의 구분, 민족주의 인식론이 해방 이후 언론 평가 기준으로 유력함을 보여주는 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친일인사 명단에는 경성방송 근무자들이 많다. 김안서, 모윤숙, 최승일, 이서구, 이석훈, 노창성, 심우섭, 이정섭, 윤백남 등이 그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다. 『매일신보』로 넘어가면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친일 인사 명단에 오르내린다. 고재두, 김환, 김기범, 김기태, 김동진, 김선흠, 김형원, 문재철, 박석윤, 방태경, 서춘, 서강백, 선우일, 송순기, 심우섭(경성방송 겸직), 유광렬, 이기세, 이기찬, 이상철, 이상협, 이성근, 이원영, 이윤중, 이장춘, 이상수, 장직상, 정우택, 장인익, 조용만, 최린, 최서해, 최준집, 최창학, 최형직, 홍양명, 홍종인. 그들의 친일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겠지만 그들이 경성방송이나 『매일신보』 등에 몸담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들의 근무처가 친일 분류에서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행태를 보면 과연 근무지 자체가 분류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학자들이 나눈 ‘민족지’(혹은 민간지)와 ‘기관지’ 간 경계는 당시 언론인에게는 전혀 높은 문턱이 아닌 듯 보였다. ‘민족지’와 친일언론기관이었던 『매일신보』, 경성방송을 언론인들은 자유로이 오가고 있었다(아래 참조). 『매일신보』가 없었다면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간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인적 자원 교류는 많았다. 또 1940년

의 양 민간지 폐간 때는 『매일신보』가 이들 언론인들을 대거 흡수한다. 물론 그 중간에도 많은 언론인들이 ‘민족지’와 ‘기관지’간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신문과 방송 인력 이동도 잦았다. 심지어는 총독부 기관지이자 일본어 신문이었던 『경성일보』도 그 교류의 자장 안에 들어와 있었다(강영수, 1948). 문턱을 넘나들었던 대표적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제경, 1938년 경성방송, 1941년 『매일신보』
- 곽복산, 『동아일보』에서 1940년 『매일신보』 사회부 기자
- 김규택 만화가, 『조선일보』, 이후 『매일신보』 정리부 근무
- 김팔봉, 1920년대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다시 『매일신보』
- 김형원, 1919년 『매일신보』 입사, 『동아일보』 창간 참여, 사회부장, 이후 『조선일보』, 『중외일보』, 1934년 『조선일보』 편집국장, 1938년 『매일신보』 편집국장
- 남상일, 1918년 『매일신보』, 『동아일보』, 1930년 다시 『매일신보』
- 민태원, 1914년 『매일신보』 입사, 1923년 『동아일보』 사회부장, 정치부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1926년 『중외일보』 편집국장
- 백대진, 1919 『매일신보』, 1932년 『조선일보』 지방부장
- 서승효, 1919 『매일신보』 입사, 『동아일보』 창간 참여, 『중외일보』 지방부장, 1932년 『매일신보』
- 심우섭, 『매일신보』, 경성방송, 다시 『매일신보』
- 유광렬, 1919년 『매일신보』 입사, 『만주일보』, 1920년 『동아일보』 창간 참여, 『매일신보』 편집국장
- 윤백남(윤교중), 1912년 『매일신보』, 1918년 재입사, 『시사신문』 편집장, 1936~1939, 『동아일보』, 경성 방송.
- 이상협, 1912년 『매일신보』 입사, 『동아일보』 발행인, 편집국장
- 이서구, 『매일신보』에서 시작, 『동아일보』 창간 참여, 『매일신보』로 돌아옴, 1938년 12월부터 경성방송, 한국 방송극의 대가로 남음.
- 이석훈, 『매일신보』, 경성방송
- 정우택, 『대한매일신보』 통신원, 1921년 『매일신보』 발행인 겸 편집인, 1925년 『동아일보』 경리부장
- 정인익, 『매일신보』 통신부 기자, 『조선일보』, 다시 『매일신보』
- 홍난파, 1918년 『매일신보』, 경성방송
- 홍종인, 1940년 『조선일보』 폐간 후, 『매일신보』

매일 신문이 발간되고, 방송이 흘러나오고 그를 구독하거나 청취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매스컴 현상은 벌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떠나 언론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확인했고, 그 일자리에 맡겨진 임무들도 인지하고 있었다. 언론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된 셈이다. 민족적 문제를 다루는 지사적 언론인이 아니라 매일 매일 기사를 채우고, 방송 시간을 매우는 보편적 언론인의 모습을 보편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셈이다. 언론제도의 성숙, 언론인의 등장은 언론이라는 근대적 습속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주체의 산포도 보게 된다. 해방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언론은 비상한 시기에 정보를 접해야

하는 습속의 연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두고 민간언론 혹은 민족언론이 사라진 순간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확고해지는 그런 순간으로 규정해야 하지 않는지 질문해야 한다.²¹⁾ 민족지가 사라진 그 순간에 오히려 근대적 공적 공간은 더욱 커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는 습속이 자리 잡았을 수 있다. 해방 하면 으레 라디오 방송을 떠올리는 것도 그런 습속 형성의 결과라고 보는 일도 결코 무리만은 아닐 것이다.

경성방송 ‘조선어 강좌’ 편성이나 ‘단파방송수신사건’은 경성방송을 친일언론기관으로만 규정짓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서재길, 2006). 제2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선어로 방송을 했던 탓에 총독부 감시 하에서 조선어 다듣기, 맞춤법, 조선 라디오극, 조선어 강좌를 실시하였다. 일본어 교육에도 불구하고 1942년 현재 일본어 회화 가능자가 10% 정도에 머물렀기에 전시총력체제 선전은 오히려 더 조선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내선일체의 강조가 더욱 더 조선어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언론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셈이다(M. Robinson 2006, pp. 103~128).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방송원들은 이후 회고하는 자리에서 ‘민족 언어’를 지킨다는 신념으로 방송에 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같은 회고 내용보다는 방송원으로서의 언어(올바른 발음, 효율적 전달)에 대한 책무 등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는 발언이 더 신빙성이 간다. 방송원 회고담 중에는 중계방송을 했던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더 맛 잘 나는 언어를 사용했는가로 그 유능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민족 언어 등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방송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었고, 그 관심은 방송 평가 기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언론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셈이다.

1946년 광복산 등의 신문 기자출신과 민재호 등의 방송원 출신들은 ‘서울신문학원’을 설립한다. 언론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이 같은 기획은 언론직 수행 방식, 평가 방식 등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민족주의 정신의 발휘를 강조한 언론 교육, 평가가 있긴 했지만 해방 이후 언론사 연구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민족주의는 최고의 규범으로 언론 지형에 남아 있진 않았을 것이다.

‘단파방송수신사건’은 방송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제하 방송 사건이다. “민족지”로 일컬어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자랑스레 내놓는 필화에 버금가는 항일운동적 방송사건으로 이 사건을 수식하곤 한다. 한국 방송 80주년을 맞았다며²²⁾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한국방송공사(KBS)는 특집으로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화한 방송을 2007년 3·1절 기념으로 보냈다. 약 150여 명이 옥고를 치렀고, 그 중 몇 명은 생명을 잃기도 한 이 사건은 1942년 12월 말에 주요 인물들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외 전황에 대한 근거 있는 소식들이 시중에 떠돌자 일본 경찰은 그 진원지를 찾고자 수사를 벌인다.²³⁾ 일본 경찰은 단파방송 수신이 그 진원이라고 확신하

21) 이 글의 맨 처음에 언급했던 일제강점기 언론사 시기 구분과는 확연히 다르게 인식된다.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는 마치 언론이 암흑기였던 것으로 파악하지만 그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시기로 규정하게 된다.

22) 경성방송은 1927년 2월 16일부터 본 방송을 개시했다

23) 총독부경찰국에서 1943에 펴낸 『朝鮮不隱言論取締集計書』는 라디오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이 유언비어로 유통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 단파방송 청취를 통해 소식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선다. 당시 단파방송 수신은 금지되어 있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면서 단파방송 수신기를 모두 압수했을 정도로 그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압수된 수신기는 경성방송국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경성방송에 종사하고 있었던 일본인 방송원들도 전황을 단파방송 수신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술회하는 것으로 미루어 단파방송은 유일한 국외 뉴스원이었다는 짐작도 가능하다(시노하라, 2006). 경찰은 조선 내 주요 정치인들이 단파방송의 내용을 얻게 된 진원이 경성방송임을 확인하고 수사, 검거에 나서 200 여명을 검거한다.

성기석은 재판에서 이 사건의 주모자로 가장 무거운 2년형을 받는다. 1938년 경성방송에 입사한 그는 기술원이었다.²⁴⁾ 그가 배치된 곳은 방송 기기의 수리와 각종 실험을 병행하던 기술부 조사과 시험소였다. 거기서 추방된 외국 선교사로부터 압수한 단파 수신기로 방송을 청취하였다. 이후 1939년부터 단파방송수신기 개발에 관심을 보였고, 제작에 성공한다. 제작된 수신기를 통해 해외 방송을 듣기는 했지만 외국어를 해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해외로부터 방송되던 한국어 방송을 우연히 청취하게 된다. 중국 중경 중앙단파광파전대(重慶中央短波廣播電臺, 이후 國際廣播電臺 XGOX, XGOY로 개칭)를 통해 1939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내보내는 한국어 방송을 청취한다. 성기석은 이 방송을 통해 임시정부의장이었던 김규식의 방송도 들었다고 회고했다.²⁵⁾ 1942년 8월 29일부터 시작한 미국의 소리(VOA: 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도 청취하였다(박기성, 1994).

단파방송을 들은 성기석과 동료들에 송남헌, 문석준, 홍익범이 접근을 한다. 이들은 당시 경성의 주요 정치인인 송진우, 이인, 김병로, 허헌, 여운형 등에 다시 전한다(김삼용, 2000).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던 홍익범은 『동아일보』 계열의 주요 인사인 송진우, 김병로, 이인 등에 청취 내용을 전했다. 주로 좌익 계열에 청취내용을 전한 문석준은 『조선일보』 영업부장 출신이다.²⁶⁾ 전달된 내용은 일본과 전쟁의 전황, 연합국의 소식, 해외에서의 독립 운동의 정보 등이었다. 방송계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사건 또한 ‘민족적’인 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KBS가 3.1절 특집으로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냈던 것도 그런 맥락이다.²⁷⁾ 민족주의적 해석은 다른 해석을 억압해왔다. 성기석이 비록 민족주의 진영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었으나 언론인으

24) 成基錫은 2001년 3월 ‘제1회 방송인 사이버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헌정 이유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15일에 있었던 金聖鎬 인물로 본 한국 초기 방송사, 獻程式 기념세미나 참조.

25) 당시 방송에 참여했던 최선화 등의 증언은 있으나 정확하게 누가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한국일보』, 1986. 3. 7).

26) 이기형은 『呂運亨 評傳』에서 고향선배인 문석준이 자신을 여운형에 소개해주었다고 밝힌다. 문석준은 일제 시대부터 마르크스주의 경제사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조선역사』, 『조선역사연구』 등 그의 저작은 해방 후 북한에서 출판되어 대학교재로 활용된 바 있다. 盧明植 (2000), 한국의 역사가 함석헌, 『한국사 시민강좌』, 제26집.

27) 3·1절은 온 민족이 함께 봉기한 사건이므로 이념, 분파를 뛰어넘어 모두가 이를 강조하고자 했다. 해방 후 좌우가 3·1절 행사를 따로 치렀던 것도 ‘온 민족이 봉기한 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3·1절은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진 측에서 가장 앞에 내세우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3월 만세 운동처럼 온 민족이 모두 함께 반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건이었다.

로서 갖는 사명감, 막연함을 정보 접근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습성의 자리매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송남현, 1964).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작동했을 수 있다.²⁸⁾ 정보를 추구하고, 불확실성을 감소하면서도 그 정보를 공유하려는 전문적 송신자(professional communicators)의 등장과 안착, 그리고 그에 맞추어 형성되는 송신자 의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보 습득, 정보 공유의 방식 등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식민지 하에서 친일 혹은 저항으로만 논의해서는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근대적 습속들이 받아들여지고, 정착하고 있었던 셈이다. 총독부의 감시 체제 등으로 인한 억압 권력 탓에 이 같은 습속은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억압 권력이 견어질 즈음해서는 적극성을 띠게 된다.²⁹⁾ 언론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편집권의 독립 등등은 일제 시대에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직업 규범으로서 언젠가는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경성일보』에서 벌어졌던 해방 직후의 일련의 사건들이 그런 부분을 짐작케 해준다.

해방 공간에서 유일한 한글 신문이었던 『매일신보』는 곧 바로 건준의 접수 대상이 된다. 건준은 최익한, 이여성, 양재하, 김광수 등을 신문위원으로 지명하고 『매일신보』를 접수해 『해방일보』라는 신문을 발행할 계획을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매일신보』 자치위원회의 저항으로 이뤄지진 못한다(김영상, 2001). 『매일신보』는 건준에 접수되진 않았고, 당시 해방 공간에서 치안 유지 등에 힘을 쓰던 건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혹자는 이 당시의 『매일신보』가 건준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매일신보』 15일, 16일 양일간 지면에서 해방, 광복, 독립 등의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15일자 지면은 일본어 신문인 『경성일보』의 조판과 거의 다름이 없다. 17일자 신문부터 건준 소식, 해방 소식을 전한다. 『매일신보』가 건준을 주로 보도한 것은 당시에는 건준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조직도 없었고, 국내 정치세력의 집결체 모습을 띤 건준을 따를 도리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³⁰⁾ 해방 직후 보여준 임시정부에 대한 소식, 해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배려, 이후 송진우 등의 국민대회 준비회, 이승만 보도 등은 『매일신보』의 급격한 지면변화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매일신보』 출신 중 일부는 독립하여 10월 5일 『자유신문』을 창간한다.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매일신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정인익이 사장을 맡았다. 『매일신보』 사회부장이던 이정순은 편집국장을 맡았다. 또 다른 『매일신보』 출신인 마태영은 편집위원을 맡다 이후 편집국장이 된다. 『자유신문』은 진보적 색채의 논조를 유지하며 이상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표방했다. 또

28) 성기석이 단과방송을 수신한다는 말을 듣고 아동문학 동인이던 양제현에 접근했다고 한다. 양제현은 단과방송 수신사건에 와다(和田) 방송원으로 등장한다. 양제현의 아버지 양인조는 임시정부 재정부 차장이던 양우조의 사촌인데 그도 아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도서출판 선인, 90~91쪽.

29) 일본 NHK 경우 패전 직후 일본의 우익들이 우려할 정도로 급속히 진보적 색채를 띠게 된다. 일본 우익들은 그를 견제하기 위해 신문경영자들에 민방설립을 의뢰하고 적극 권장한다. 松田浩 (2005), 『NHK—問われる公共放送』, 岩波新書.

30) 일본으로부터 소식을 전하던 동맹통신도 두절되었으므로 스스로 뉴스를 찾아 나서야 할 정도였다. <매일신보> 접수를 위해 다가온 건준을 뿌리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준의 기관지 역할을 한다(정진석, 2005, 287쪽).

다른 기관지인 일어판 신문 『경성일보』도 해방과 함께 조선인 언론인들이 접수하려 했으나 요코미소 미쓰테루(横溝光暉) 사장의 일본군 협력 요청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소동으로 『경성일보』는 17, 18일자 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다(横溝光暉, 1974). 『경성일보』 접수 또한 건준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다. 접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경성일보』 내 조선인 기자들은 9월 8일에 『조선인민보』를 창간한다. 『조선인민보』는 초기 편집에서 이상적 민주주의 등을 설파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알려진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기자들이 진보적 색채의 『자유신문』과 건준 지지의 좌파민주주의 계열 『조선인민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매일신보』, 『경성일보』 언론인 집단을 친일분자로만 규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 소유 권력,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언론 행위에 대한 욕망이 혹 그들로 하여금 신문을 새롭게 만들도록 추동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해방 정국에서 벌어졌던 여하간의 언론행위는 모두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해방 이후의 언론은 좌파인가 우파인가라는 새로운 분류법에 갇히게 되었다. 민족국가 정부 수립의 서사에 갇힌 결과였다. 해방 전 언론에 가해졌던 민족인가, 반민족인가라는 질문이 해방 후 언론에 대해서는 민족국가 정부 수립에 어떤 입장이었는가. 좌파인가, 우파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질문 변화는 엄격한 의미에서 변화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 질문의 연장이다. 좌파, 우파의 구분의 중심에는 여전히 과거 ‘민족자’였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좌우를 가른 성향이 강해 보인다. 그런 탓에 근대적 의미의 언론, 그에 대한 태도, 소통이 탄생하고, 언론문화가 만들어지고, 언론관행이 형성되며, 언론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만들어지고 있었음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

5. 정치성(the political)의 복원

소통은 정보의 순환을 의미한다. 소통의 순환 과정을 채우는 정보는 공적 성격을 갖는다. 경성방송에서 여흥을 위해 틀어주는 국악은 공적 성격의 정보다. 그것을 공적이라 함은 경성방송이라는 지상파를 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정보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공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국악이 형성되고, 지켜지기까지에 공적 기구의 개입이 불가피하였기에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식민 지배를 위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경성방송의 탄생은 새로운 공적 영역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한국방송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매일신보』가 전달하는 뉴스도 마찬가지다. 『매일신보』 뉴스가 형성되는 과정은 그것에 대한 사회적 요청, 공적 기구에 의해 정보 가공, 공적 성격을 가진 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일을 거친다. 그리고 전달된 정보는 일정 사회적 효력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뉴스는 공적일 수밖에 없다. 그 전부터 조선에 신문현상이 있긴 했지만 『매일신보』와 조선, 동아 양 민간지의 공존으로 대중적 보급(mass circulation)의 신문 현상이 본격화됐고, 그것이 민중의 일상 안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그 같은 식민지적 공공성의 논의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해방 전후사에서 공적 성격의 사회적 재화를 다루는 공공성은 심각한 논의 대상이 되질 못했다.

해방 전 식민시기의 공공성은 일제의 기획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에 저항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이다. 민족지로 파악된 언론은 ‘기관지’에 밀리거나 그를 만회하기 위한 민족적 저항 주체로 규정되었다. 항일적 언론 행위야말로 공공성의 발휘로 받아들여졌다. 기관지나 친일언론기관의 언론행위는 그 반대의 것, 일제의 기획 수행으로 파악되기 일쑤였다. 항일인가, 친일인가를 따지는 민족주의의 판단기준을 좀체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방 전, 후 드러나는 다양한 언론 행위들도 그 혈통으로만 평가받아온 경향이 있다. 언론행위를 이념적 혈통으로 구분 짓는 해방 직후의 언론에 대한 평가도 민족주의의 연장 선 상에 놓여 있었다. 언론행위를 좌우익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작업 배후에는 누가 주도하는 민족국가 정부수립에 일조를 했는가를 따지려는 의도가 있다. 이는 민족주의 평가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매일신보』나 『경성일보』 출신들이 보여주는 친 건준의 보도 태도에서는 ‘좌익’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라는 해석을 내린다. 항일을 중심으로 하는 해방 전 언론에 대한 평가나, 좌우익 이념을 중심으로 내리는 언론에 대한 평가는 일제하 식민지적 공공성 영역이 존재했고, 그에 준하는 규율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감게 된다.

앞의 두 장의 사진(<사진 1, 2>)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첫 번째 사진에는 이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어떤 것도 민족의 소리보다 크지 않았던 그날을 담고 있다. 이념의 그림자를 담은 <사진 1>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민족의 큰 소리는 이제는 영원히 ‘기원’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고, 이미 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역사 담론에서 민족의 소리를 이기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다. 식민지 시기 논의에서는 더욱 그렇다. 새로운 역사 기술, 식민지 근대화론 등으로 민족의 소리를 줄일 우려가 제기되는 요즘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식민지 시기의 소통 구조에 민족주의적 해석을 달지 않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사진 안에 있는 성기석을 항일운동이라는 프레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는 일은 전통적 역사 해석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³¹⁾ 하지만 민족주의 해석 안에 가두어 놓은 소통에 관한 역사는 너무도 많은 정보를 잃게 만들고, 왜곡된 역사 해석으로 이어지게 한다.

천황의 포츠담선언 수락 방송 이후 경성방송은 조선어 해설방송을 내보냈고 이어 다카하시(高橋) 경무국장의 <중전을 맞이하여>라는 담화방송을 실시했다. 조선인들이 냉정을 찾고, 일본 내 조선인들을 생각하여 조선 내 일본인들을 해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다카하시의 담화내용은 조선어로 번역되어 방송되었다. 일본어로만 방송되던 경성방송 제1 방송에서 일본어와 조선어가 혼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42년 4월 27일 방송전파관제를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던 조선어 방송은 해방 당시에 재개되어 있었으나 주요 뉴스 등은 제 1방송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그러나 8월 15일 이후 제1 방송은 일본어와 조선어를 섞어 방송하였고, 조선어 방송이던 제 2방송은 중단하고 있었다. 9월 초에 이르러 일본인 방송원과 조선 방송인 간의 편성권을 놓고 처음으로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회고하는 것으로 미루어 해방 직후 20여 일 동안 라디오 방송을 둘러싸고 큰 갈등은 없었던 듯하다. 제1 방송은 9월 9일 종료되고, 일본인 직원들은

31) 성기석의 가족에 따르면 서대문 형무소 만세 사진 맨 앞자리에 성기석이 있다고 2007년 3월 1일 KBS 다큐멘터리에서 밝히고 있다.

10월 2일자로 전원 해고된다.

하지만 이때 일본인과 조선인을 떠나 질서 유지라는 방송의 기능에 모두 동의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 방송원들은 경성방송의 지속적인 선무 방송이 일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았음을 표방하는 증언에서는 8월 16일 건준에서 청년들을 보내 방송을 접수하고자 하는 것을 조선 방송원들이 강력히 반대해 막아냈다는 부분이 있다. 이 때 부터 소위 억압 권력이 물러나고 난 후의 언론의 중립성, 비 당파성 등을 강조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한국 방송의 수행지침을 만들고, 이념을 형성해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전 ‘민족자’와 ‘기관자’ 간에는 인적 교류도 있었지만 기사 내용을 통한 경쟁도 빈번했다. 대표적인 경쟁은 문예란 등을 통해서 이뤄졌다.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경쟁인데 심지어 어느 한편에서 게재된 작가는 다른 한 편에서 게재하지 않을 정도로 경쟁은 심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경쟁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기관자’에 게재된 친일작가 혹은 친일작품을 ‘민족자’가 거부했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신화다. 기관지를 통해서도 수많은 작품들이 발표되고, 경성방송을 통해서도 활발한 극운동, 예술운동이 벌어졌다. 식민지적 공공성 영역을 기관지, 민족지, 민간지 등이 모두 한데 뒤엎겨 경쟁하던 모습으로 상정하지 않고서는, 민족지 혹은 민간지 등의 신화에 파묻히는 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가능성은 실종된다.

사실 식민 말기, 혹은 해방 당시를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읽어내기 시작하면 정치는 과소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거대 정치는 해외로 이주했고, 이른바 총동원체제로 인한 무단 억압적 전제 정치만 남았을 뿐이다. 민족에 대한 수탈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저항은 할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족주의로 보는 그 시기는 왜소한 정치만 남게 된다. 식민지적 공공성을 논의하는 일은 왜소한 정치 영역의 복원이다. 민족해방운동이 아닌 대부분의 행위에서 정치성을 찾지는 일이다. 경성방송을 유엔비어와 비교하고, 소문으로 들리는 단파방송뉴스와 『매일신보』의 내용을 맞추어가는 그런 일도 정치성을 갖는다. 일상에서 정치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공적인 일인바 그가 바로 당시의 식민지적 공공성이었던 셈이다.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해방이라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기억해둔 공적인 일, 식민지적 공공성, 그것의 정치성이 그 후의 우리 삶 속에 연장되었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공공성을 추적해가는 일은 과거에 과거를 붙이는 회고록적 작업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과거에서 찾는 계보학적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강영수 (1948). 해방 후 남조선 신문인 동태. 『신문기자수첩』. 모던출판사.
 강창덕 (2005). 10월 1일, 대구 시민들 분노하다. KBS 광복 60주년 특별 프로젝트 팀(편). 『8·15의 기억: 해방 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 서울: 한길사, 180~189.

- 김규환 (1978). 『일제의 대한 언론선전정책』. 서울: 이우출판사.
- 김동만 (1991).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14호, 191~207.
- 김민환 (1993). 일제시대 언론사의 시기구분. 『언론과 사회』, 1호, 46~66.
- 김민환·박용규·김문중 (2008). 『일제강점기 언론사 연구』. 서울: 나남.
- 金聖鎬 (2001). 인물로 본 한국 초기 방송사. 獻程式 기념세미나.
- 金三雄 (2000).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일제시대편』. 서울: 나남.
- 金永上 (2001). 김영상 錄取. 대한언론인 회(편). 『錄取 韓國言論史』. 대한언론인회.
- 김영희 (2002). 일제시기 라디오의 출현과 청취자. 『한국언론학보』, 46호 2권, 150~183.
- _____ (2005).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동향과 과제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1호, 94~125.
- 김준연 (1945. 12. 2). 國民大會의 발단. 『東亞日報』.
- _____ (1946. 8·15). 政界 回顧 一年 解放과 政治運動의 出發. 『東亞日報』.
- 김진균·정근식 (1997). 『근대주체의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 김창진 (1987). 미군정의 성격과 민족문제 8·15 직후 광주지방에서의 정치투쟁, 1945~1946 인민위원회 운동과 미군정의 성격. 『역사비평』, 1호, 99~135.
- 盧明植 (2000). 한국의 역사가 함석헌. 『한국사 시민강좌』, 제26집.
- 『매일신보』 (1945. 8. 15, 16, 17; 9. 9).
- 문제안 (2005). 이제부터 한국말로 방송한다. KBS 광복 60주년 특별프로젝트(편). 『8·15의 기억: 해방 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 서울: 한길사, 14~35.
- 박기성 (1994). 태평양 전시하의 해외 독립운동 방송체제: VOA 한국어 방송. 중경 임시정부 방송 및 국내 수신 실태를 중심으로. 『방송학 연구』, 5호, 5~46.
- 박용규 (2005).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28호, 1~30.
- 방학진 (2007). 올 한 해 방송계 역사 바로잡는 시간되길. 『PD저널』, 498호.
- 변은진 (1999). 일제의 파시즘 전쟁(1937~45) 조선민중의 전쟁관. 『역사문제연구』, 3호, 161~216.
- 서문당 (1987).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 下』. 서울: 서문당.
- 서재길 (2006). 空氣와 演劇: 초기의 라디오 예술론에 관한 소고. 『한국문화』, 38집, 113~135.
- 성기석 (연도 미상). 나의 抗日運動 京城放送局 短波事件. 『短波放送海外連絡運動學證資料(1941~1943)』. 國家報勳處 所藏.
- 薛義植 (1947). 『解放以後』. 東亞日報社.
- 송건호 (1976). 사상사적으로 본 한국 언론. 『저널리즘』, 가을호.
- 송남현 (1964. 9. 20). 반세기의 증언 - 경성방송국 단파사건. 『조선일보』.
- 신주백 (2006a). 역사 교과서에서 재현된 8·15. 망각된 8·15. 정근식·신주백 엮음.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선인, 27~70.
- _____ (2006b). 해방, 광복. 『역사비평』, 75호.
- _____ (2006c). 일본의 패전 대책과 식민지 조선, 그리고 역설 (1944. 7~1945). 『일본문화연구』, 제18집, 69~95.
- 심지연 (2000). 『송남현 회고록 김규식과 함께한 길』. 서울: 한울.
- 안종철 (1990).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 오오카와 키요시 (2005). 나는 지금도 아리랑을 자주 불러요. KBS 광복 60주년 특별프로젝트팀(편). 『8·15의 기억: 해방 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 서울: 한길사, 54~63.
- 유선영·박용규·이상길 외 지음 (2007). 『한국의 미디어 사회 문화사』. 서울: 한국언론재단.
- 윤선희 (2006). 해방 전후사,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기억.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143~170.
- 이경모 (1991). 『격동기의 현장』. 눈빛.
- 이규태 (2006). 해방 직후 전국준비위원회의 활동과 통일국가의 모색. 『한국근현대사연구』, 36집, 봄호, 7~46.
- 이기형 (2005). 찬탁은 애국이요 반탁은 비애국이다. KBS 광복 60주년 특별프로젝트팀(편). 『8·15의 기억: 해방 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 한길사, 266~279.
- 李德根 (1979. 8. 13). 放送局서 기다린 重大發表. 『東亞日報』.
- 이만규 (1946). 『여운형 선생 투쟁사』. 민주문화사.
- 李泳禧 (1988). 『歷程』. 서울: 創作과 批評社.
- 이정식 (2006). 『대한민국의기원』. 서울: 일조각.
- 『자유신문』 (1945. 12. 8).
- 정근식·신주백 (2006).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서울: 선인.
- 정근식 (2006). 기념관, 기념일에 나타난 8·15의 기억. 정근식·신주백(편). 『8·15의 기억과 동아시아적 지평』. 서울: 선인, 71~114.
- 정신문화연구원 편 (2000). 『경성방송국국악방송곡목록』. 민속원.
- 鄭晉錫 (1975). 『日帝下韓國言論鬭爭史』. 서울: 正音文庫.
- _____ (1993). 『韓國言論史研究』. 서울: 一潮閣.
- 정진석 (2005). 『언론조선총독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41).
- 조용만 (1992). 『京城夜話』. 도서출판 창.
- 주형일 (2003). 사진의 시간성 개념을 통해 바라 본 신문사진의 문제. 『한국언론학보』, 47권 2호, 5~29.
- 차배근 (1976). 『커뮤니케이션 개론 (상)』. 서울: 세영사.
- 채만식 (1948). 민족의 죄인. 『백민』.
- 최민지·김민주 (1976).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 최영호 (2008).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21호, 263~304.
- 한국방송협회 (1997). 『한국방송 70년사』. KBS.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서울: 선인.
- 허은 (1994). 경상북도 지역의 지방 인민위원회의 역사적 배경과 활동. 『역사연구』, 3호, 147~186.
- 小森陽一(고모리 오이치) (2003). 송태욱 역 (2003).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 종전 조서 800자로 전후 일본 다시 읽기』. 서울: 뿌리와 이파리.
- 森田芳夫, 長田かな子(모리타 요시오, 나가타 가나코) 編 (1964). 『朝鮮終戰の記録 資料編』, 第1卷, 巖南堂書店.
- 松田浩(마즈다 히로시) (2005). 『NHK一問われる公共放送』. 岩波新書.
- 佐藤卓己(사토 타쿠미) (2005). 『八月十五日の神話』. ちくま新書. 원용진·오카모토 역 (2007). 『8·15의 신화』. 서울: 궁리출판사.

- 津川泉(쓰가와 이즈미) (1999). 김재홍 역. 『JODK, 사라진 호출부호』. 커뮤니케이션북스.
- 篠原昌三(시노하라 소오조) (1981). 김재홍 역, 『JODK 조선방송협회회상기』. 조방회.
- 大島渚(오우시마 나기사) (1975). 『體驗的戰後映像論』. 朝日選書.
- 横溝光暉(요코미소 미스테루) (1974). 京城日報 終刊. 『昭和史片鱗』. 經濟來往社, 328~341.
- 朝鮮總督府警察局 (昭和 17年). 『朝鮮不隱言論取締集計書』.
- 『國際 タイムス』 (1957年 8月 16日号), 第84號.
- M. Robinson (2001). 도면희 역 (2006). 방송, 문화적 헤게모니, 식민지 근대성, 1924~1945. 신기욱·마이클 로빈슨(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103~128.

(투고일자: 2009.02.27, 수정일자: 2009.07.01, 게재확정일자: 2009.07.16)

ABSTRACT

‘Colonial Public-nes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Forced Occupation*

Yong-Jin Won**

A tendency to ignore the existence of public space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ems to be driven from nationalist historiography in which all historical events under the colonial power have to be interpreted in terms of militant controls and resistances against them. Historical approach to mass media of that period has lasted to be saturated with the tendency and forced history students to stick to the nationalist guidelines. Struggles against Japanese imperial power by national-capital-operated newspaper have been a main menu of studies on the period’s communication. The media were often hailed as fighting the colonial power for nation’s independence. The present thesis aims to criticize the nationalist point of view and to reveal that nationalist interpretations may miss a variety of historical information. Even under the severe surveillance of colonial police some journalists tried either to inform officially or to smuggle into informed groups. The colonized society could experienced fields of public-ness throughout the practices of such as media fields, cultural fields, political fields. Those fields, of course, didn’t come from the graceful favor of the colonial power but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colonized. The public-ness seemed to be born for the easiness of control, but became later a constructed field of public-ness with which the colonized semiotically wrestled the power and grew a modern type of political (un)consciousness. Depicting what happened just before 815 liberation day in Korea the present paper showed that the less nationalist historiography can render help to those seeking political practices of the colonized in a micro-level.

Key Word: colonial public-ness, colonial modernity, JODK, 『Mac-il Daily』, nationalist historiograph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KRF-2007-013-B00153)

** College of Communication Arts, Sogang Univ.